

추자해상풍력 전력 전량 육지로 보낸다

정부, 추자 해상 국가 주도 풍력발전 개발 계획 추진
 도, 생산 전력 송전 '제주행→육지행'으로 계획 수정
 “풍력발전 이익 얻기 위해 도가 기존처럼 사업 주도”

제주도가 세계 최대 규모 추자해상 풍력발전단지 생산 전력을 전부 육지로 보내는 등 송전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또 추자해상풍력 개발 사업자 공모와 인허가 절차를 정부에 맡기지 않고 기존처럼 지자체가 주도하기로 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연안 해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생산 전력은 제주 본섬으로 보내 도내에서 소비하고, 먼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전력은 전부 육지로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주 본섬과 비교적 가까운 연안 해역에 들어선 풍력발전 단지로는 한림과 탐라 등 2개가 있다. 한림을

한림해상풍력과 한경면 탐라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각각 100MW와 30MW다. 이중 탐라는 72MW 규모 풍력발전기를 추가 시설해 총 용량을 102MW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자도 본섬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먼 바다에서 추진되는 추자해상 풍력의 최대 발전 용량은 2.3GW로 원전 2기와 맞먹는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탐라와 한림해상풍력을 합친 것보다 10배 가량 크다.

도와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7월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자를 공모하며 생산 전력을 반드시 제주 본섬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 걸었다. 당시 공모엔 국내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유일하게 참여

했지만 정작 평가에 필요한 사업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최종 유찰됐다. 사업자 선정 무산 원인으로선 매년 최소 1300억원에 달하는 도민 이익 공유금과 제주 본섬과의 계통 연결 조건이 지목됐다. 도내 하루 전력 수요를 다 합쳐도 최대 1.2GW에 그치는 등 추자해상풍력 발전 용량보다 적다보니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중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도가 추자해상풍력 생산 전력을 전부 육지로 보내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단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선 제주와 최단 거리에 놓인 육상 지역인 전남과의 전력 계통 연계, 2.3GW 대규모 전력을 수용하고 수송할만 한 해저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도는 올해 말 고시될 12차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자해상풍력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 육지 계통 연결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남 데이터센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십GW의 전력이 필요한 국가 산업이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추자해상풍력은 정부 입장에서 매력적인 전력공급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추자해상풍력은 국가 전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 추자해상풍력 전력을 전부 육지로 보내는 것으로 응모 요건을 변경해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제주도는 정부가 추자 해상을 국가 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선 기존처럼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2면으로 계속

4·3희생자 75명·유족 274명 정부, 피해자 추가 공식 인정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된 가운데 출생신고 전 사망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는 24일 제38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 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정, 4명은 재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성음민속마을 즐기는 외국인관광객들

25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음민속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초가를 구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아내 살해 퇴직경찰 ‘접근금지’ 어기고 범행... 4면 / 제주,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 평균 월 72만원... 6면

2026 JDC와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한라일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올해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를 총 2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차

▶ **일시** : 9월 5일(토) 오전 10시~낮 12시

▶ **장소** : 한라일보 3층 회의실 (제주시 세사로 154)

▶ **모집대상** : 20명 내외 (초등학교 3~5학년, **선택**준 마감), 참가비 무료

▶ **신청기간** : 9월 4일(금)까지

▶ **접수방법** : 링크 (<https://forms.gle/WjaZkoAr6R3hdSYw5>) 또는 QR코드
 *선착순 접수인만큼 접수 후 꼭 확인 전화 또는 문자

▶ **교육내용** : 만장굴을 발견한 부총리와 꼬마탐험대: 햇불하나로 어둠을 밝히다

▶ **문의** : 010-4369-3011 ※2차는 9월 12일(토) 진행 예정

공동기획 : **한라일보 · JDC**

내일 ‘제주 오름 보존·관리 모색 정책’ 토론회 오름별 특성 맞는 지속가능 방안 논의

제주 오름의 조지 생태문화경관 보전과 오름 지명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와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이상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오름의 가치 재조명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라일보와 뉴시스 제주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 오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자’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임재영 박사(뉴시스 제주본부장)가 ‘제주 오름 조지의 생태문화경관 소실과 보전·관리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임 박사는 이번 발표에서 우마방목과 풀베기 등 전통적인 이용이 줄고 곰솔과 관목이 확산하면서 사라지는 오름 조지와 개방형 경관의 실태를 짚어본다.

또한 자연천이와 조지 보전의 관계, 어린 곰솔과 관목의 선택적 제거와 예초·방목, 주민 참여형 관리 등 오름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찬수 박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가 ‘제주도 오름 지명 해독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가메오름을 가마솔, 다랑쉬오름을 달, 빈네오름을 비너, 활오름을 활과 연결하는 등 현재 널리 알려진 지명 유래가 역사적으로 타당함을 재검토한다.

주제발표후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이남근 제주도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박찬식 박사(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좌명은 박사(오름연구소 소 사무국장), 고윤경 제주도 환경정책과 꽃자왈생태관광팀장 등이 참여해 곰솔림 확산과 조지 관리, 주민 참여방안, 잘못 알려진 지명 유래의 검증과 체계적인 조사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태윤기자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이

중소기업공제기금

누구나 쉽게
 언제나 간편하게

홍보대사
 박상원

가입문의 1668-3984 | fund.kbiz.or.kr



부금 만기이자 적립

월10~300만원(3/4/5년)
 가입 후 1개월이상 경과, 대출 가능



운영자금대출

무보증·무담보
 부금잔액 최대 3배 이내



매출채권대출

(전자) 어음 대출
 부금잔액 최대 7배 이내



비대면 원클릭 대출

온라인 즉시 대출
 부금잔액 1.5배 이내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5-194호(2026.1.1.~2026.12.31.)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정보를 가려 제공됩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중앙회(주)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